

주공 대신 농기공이 전남 온다면...

경제적 파급효과 6분의 1로 줄어

미래 존속 여부도 불투명... 'J프로젝트'엔 시너지 농업생명 관련기관, 생물산업 연계 효과 큰 기대



한전은 광주로...

정부는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을 광주로 옮기고 농업기반공사는 전남, 도로공사는 경남으로 각각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177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안을 24일 발표한다. 사진은 광주 이전이 최종 확정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연합뉴스

대규모 기관으로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를 요구했던 전남도는 주공 대신 농업기반공사(이하 농기공)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지자 크게 실망하고 있다. 전남도청 주요간부들은 주공유치가 물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23일 오후 도대체 어떻게 도민들에게 이를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다만 전남으로 오게될 공공기관 전체로 볼때는 타 시도보다 3~4개 더 많은 기관에 유입 인수도 300~400명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도민들에게 변명거리는 있지만 주택공사 급의 대규모 기관 1개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공공기관 유치사업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당초 대규모 기관으로 한국전력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한전 본사와 자회사 2곳을 묶어 배치하는 '1+2'을 내놓자 한전대신 주공 유지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입장에서 한반도 요구하지 않은 농기공의 전남 행은 의외라는 입장이다. 또 일부에선 농기공이 장차 전남이 부러져 불투명한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더욱 심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주공, 농기공보다 최대 6배 규모 경기도 의왕시에 본사를 둔 농기공은 본사 인원 611명에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세 납부액은 15억3천900만원, 예산은 2조3천108억원에 달한다.

이는 이전대상 10대 대규모 기관중 인원과 예산규모는 각각 6위, 지방세 납부액은 7위 수준이며 전체로 보아 8위로 평가된다.

반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주공은 본사 정원만 1천459명에 지방세 납부액은 87억6천200만원이고 1년 예산은 10조1천922억원으로 10대 기관 가운데 인원은 1위, 예산은 2위, 지방세 납부액은 3위를 차지하는 초대형 기관이다.

단순하게 비교하더라도 농기공은 주공에 비해 인원은 41.8% 수준이고 예산은 22.6%, 지방세 납부액은 17.

5%에 그쳐 파급효과가 최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농기공의 존립여부 농기공의 주 업무는 농업융합 개발과 경제정리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및 정비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에는 해수면 매립에 의한 간척지 조성 이 큰 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간척지 조성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새만금간척지 사태에서 보듯이 조성을 둘러싸고도 한 결과 등 논쟁이 많아 한계에 다다른 사업이다. 이렇다보니 머지않아 농업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대상을 개발하지 않는 한 존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돼왔다.

이는 농기공이 이번 지방이전 공공기관중 현재의 규모로도 전남에 불만이지만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타 기관에 비해 현저히 가치가 낮아지는 변수다. 다만 전남의 경우 최대 역점사업인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의 성사가 대당면적의 70%를 넘는 국유 간척지의 무상 양도·양수에 달려있다고 보니 간척지를 소유한 농기공의 역할에 따라 시너지(상승)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농업생명 기관, 파급효과 높일 듯 전남도는 농기공과 함께 농업생명공학연구원과 농업과학기술원이 오는데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이들 두 기관은 전남도가 신청한 22개 기관중 산업특화기능군에 속하는 주력 기관이다.

농업과학기술원은 직원 수 368명으로 꽤 규모가 크다. 각종 작물의 병해충과 종묘기술을 개발,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맡고 있다.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과 연관성이 높다. 또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은 직원 125명에 불과하지만 생물 유전자 연구기관으로 상당한 연구성과를 가지고 있어 전남도의 생물산업과 연계할 경우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규모 기관 일반현황

기관명	본사 위치	본사인원 (정원)	'04년 지방세 납부액(백만원)	'04년 예산액 (억원)	가입조합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1,125	18,523	295,482	한국노총
대한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1,459	8,762	101,922	한국노총
한국토지공사	경기 성남시	796	17,135	60,132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695	8,065	61,430	한국노총
한국가스공사	경기 성남시	632	2,263	76,690	민주노총
한국석유공사	경기 안양시	508	1,758	18,733	한국노총
대한항공집행공사	서울시 동작구	310	-	-	한국노총
농업기반공사	경기 의왕시	611	1,539	23,108	한국노총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중구	367	582	-	민주노총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시 서초구	315	-	-	한국노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05.5.25일 국회 건교위 보고자료)



지방이전 勞-政 협약식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왼쪽)과 민주노총 양영규 공공연맹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노·정 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 이전’ 광주시·경제계 “환영”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23일 한국전력이 광주로 이전될 것으로 알려지자 광주시와 경제계 등은 낙후도를 감안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특히 한전 본사와 함께 한전기공과 한국전력거래소 등 2개 자회사가 광주로 옮겨옴으로써 인구유입과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수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

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날 오후 환영 성명을 발표, 한전의 광주이전을 환영했다.

상의는 “일반 공공기관 10개 이상을 유치하는 것보다 지역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1천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중 상당수가 광주로 이동해 올 경우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전남 住公유치 전쟁때 지역 국회의원 뿔했나

최고 낙후지역임을 앞세워 전남도가 이전을 희망했던 대형공공기관(주택공사)의 유치가 실패한 것은 정부의 낙후지역 개발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실패 및 역량 부족도 큰 원인이 됐다.

특히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를 놓고 단 한차례도 사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전체 회의도 열지 않았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지역 국회의원들도 서로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심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으며,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타 시·도 출신 국회의원들에 비해 일처민 행동을 보이

의 공으로 만들고, 잘 못되면 우리들(여당)책임으로 돌리려 하지 않았느냐”면서 화살을 엉뚱하게 언론들로 돌려 큰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불평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느냐, 그동안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데 있다.

유선호 의원은 공공기관 발표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모든 지자체와 각 지역의 정치세력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지역이 희망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는 시점인 지난 20일 ‘한-유럽 의회 외교 협의회 회원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 23일 오후 늦게서야 귀국했다. 유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의 여타 의원들 대부분도 의지가 없

열린우리 전체회의 한번도 안해 민주당 외면... 道는 달랑 문건만

지 않았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전남도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그동안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 지역의 정치권과 사전에 단 한차례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에 대해서는 사후 협조보고 형식으로 실무급 인사가 국회를 단 한 차례 방문, 유치 희망 지역이 담긴 문건을 전달해 주는데 그쳤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거의 외면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전남지역 의원들이 그동안 대형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보여준 모습은 한심할 정도였다.

7명의 전남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이같은 대형현안이 있는 데도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는 단 한차례도 갖지 않았다. 이같은 지적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유선호 전남도당 위원장은 “당초부터 지역 언론들이 잘 됐으면 박준경 전남지사

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비근하게 지난 20일의 상황이었다. 이날 오후 국

회 의원회관에서는 전남지역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실무담당자들을 불러 대형 공공기관 이전 부락을 위한 막바지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여기에 참석한 전남지역 의원들은 추승용 의원과 서갑원의 원 2명뿐이었다. 한 의원의 측근은 지역 의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협조요청을 해도 부속할관에 의원들의 참석이 이처럼 저조한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민주당도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자칭 ‘전남은 우리의 뒷밭’이라고 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면 지역의 최대 현안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어야 했는데 해당 상임위원(건설교통위원장)인 최인기 의원과 이낙연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문체에 매달리는 의원이 없었다. 야당의 한계를 인정한다 할 지라도, 전남지역 말고는 국회의원을 단 한석도 갖지 못한 민주당으로서 ‘대형 공공기관 전남 유치 특별 대책반’이라고 구축, 이문체에 올인했어도 부족했다는 비난이다.

/김석원기자 sykim@kwangju.co.kr

가방친을 모험하자.

가방친은... (text about the product)

가방친은... (text about the product)

가방친은... (text about the product)

동영제 선례기 유희기

동영제 선례기 유희기... (text about the product)

동영제 선례기 유희기... (text about the product)

동영제 선례기 유희기... (text about the product)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인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인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text about the construction method)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인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text about the construction method)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인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text about the construction method)